

칼럼

이석영 구해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부주관



민주주의 성장의 원동력, 정치후원금

초등학교 시절 반장 후보로 나온 친구가 반 친구들에게 햄버거를 사준 적이 있었다. 과거 회장 선거나 반장선거를 생각해보면 선거에 나온 친구가 반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사줬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회장이나 반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후보자가 반 친구들에게 처음 경험했던 초등학교의 선거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왔었다.

성인이 된 지금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한층 성숙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정치후원금에 대한 인식 또한 다양화되었다. 하지만, 뉴스나 영화에서 대부분의 정치자금이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문화에 대해 열심히 홍보해도 일반 유권자는 본능적으로 정치자금 후원에 거부감을 가지기 쉽다.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에는 최초 흑인대통령 후보자가 있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당시 후보자였던 오바마는 풍부한 선거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의 정치자금에 그가 부자여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서도 아니었다. 그는 상당히 많은 정치후원금을 기부 받았는데 그 중 200달러 미만의 소액 후원자는 전체의 4분의 1 달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에게 기부한 400만 명이 넘는 기부자들 중에 3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일반 유권자들의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문화 덕분에 오바마는 풍부한 정치자금을 통해 다수의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 철학, 공약 등을 홍보할 수 있었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렇게 미국의 유권자들은 투표 외에도 정치후원금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표출하고 있다. 미국의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문화는 소위 금수저라고 불리는 기득권 집단만 정계에 입문하고 정치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의 서민들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서 서민 지향적이고 깨끗한 정치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후원금에 대한 인식이 천천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치자금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위에 예시와 같이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문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후원금 프로세스는 과거에 비해 많이 다양해지고 간편해졌다. 정치자금 후원금 센터(<http://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전화 결제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나 페이코와 같은 간편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더불어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최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각계각층의 많은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다. 우리가 과거에 1인 1표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투표해봤자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고 치부해버렸다면 현재의 우리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 정치후원금 차례다.

오바마가 모두에게 훌륭한 대통령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오바마에게 정치후원금이 모이지 않았다면 미국 최초의 흑인대통령은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학교에서 '시간만 더 공부하면 미래 배우자가 더 훌륭하게 바뀐다'는 급훈을 본적이 있다. 우리가 소액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문화가 조금씩 정착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도 점진적으로 더 훌륭하게 변화할 거라고 확신한다.

社 說

연말 특별사면 대상 신중해야

정부가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중심으로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야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자칫 선심성 사면으로도 비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만큼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우선 파악해 선별 작업에 들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3년차인 2005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자 204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이 대거 사면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17대 대선·총선 때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이 사면받고 18대 총선 사범 일부는 특별감형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2017년 연말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6천444명을 사면·감형하면서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하다가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을 포함시켰다.

올해 삼일절에는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 밀양 송전탑 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우선 파악해 선별 작업에 들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3년차인 2005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자 204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이 대거 사면받았다.

아직 기초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지만 특사의 대상과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지만 정부는 조금이나마 불만이나 반발하는 세력이 없도록 특사 선발 대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은 비탈길 감속방어 주차방법 이렇게

비탈길, 경사로에 세워 둔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지나가던 행인을 덮친 사고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마 운전자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에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 비탈길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사로 주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사로에 주차할 때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주세요. 주차를 할 때에는 자동차 기어를 P상태로 놓는데요. 각도가 높은 경사에서는 차량의 무게를 견디기엔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로에 주차를 해 놓을 경우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최대한 당겨서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고임목이나 벽돌을 경사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놓아주세요.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P상태 사이드 브레이크는 물론, 고임목이나 벽돌을 놓아 차량의 밀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내리막일 경우 고임목의 위치는 내리막일 경우 고임목의 위치는 앞바퀴 앞쪽에 놓고, 오르막의 경우 뒷바퀴 뒤쪽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여 내리막에서는 앞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오르막에서는 뒤로 굴러가는 것을 막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셋째, 경사로에 주차를 할 때 바퀴 방향을 다르게 틀어주세요. 우선 경사의 방향에 따라 차량 방향을 반대로 놓아두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차량과 바퀴 방향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리막일 경우 핸들을 보도블록 방향으로 돌리고 오르막일 경우 핸들을 보도블록 반대 방향으로 돌려 전·후방 범퍼가 보도블록과 충돌해 경사로로 굴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거 지역이 경사진 곳에 있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경사로 주차에 의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중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방지에 대한 조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더욱 더 안전에 유의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또한 각 가정이나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백희희 /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기술인 신고 182	▲ 인광 일교율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